

# ‘공짜노동’ 유발 포괄임금 첫 기획감독…“폐지는 어려워”

## 고용부, 내년 1~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기획감독 포괄임금제 이유로 야근 등에도 임금 지급하지 않아

정부가 야근 등 추가 근무를 하고도 보상 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이른바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과 관련해 기획감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OT(Over Time) 계약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근로시간도 일정치 않은 고속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포괄임금 계약은 크게 ‘정액급’과 ‘정액수당’으로 나뉜다.

정액급은 임금 100만원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는다. 정액수당은 기본급 70만원, 법정수당 30만원으로 구분은 되지만 개별 수당 간 금액

액은 구분이 없다.

간혹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 계산의 편의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고정OT 계약을 활용하기도 한다.

고정OT 계약은 포괄임금 계약과 달리 기본급 70만원, 연장 10만원·야간 10만원·휴일 10만원 등 기본급과 각 개별 수당이 구분된다. 문제는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오남용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특히 고정OT 계약은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인한 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에 고용부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초과 근무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위반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10~20개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기획감독을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출퇴근 기록 등도 살필 방침이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은 최근 전문가들이 권고한 내용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회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12월 권고문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상시적인 근로감독 실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와 관련 최근 ‘고용부 2030 자문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근무연수가 아니라 일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특히 공짜노동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획감독에 더해 내년 2월에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지 않고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이뤄질 수 없다”며 “내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훨씬 중점을 뒀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이나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양 단장은 “포괄임금은 법원에 의해 형성된 법 논리인데, 지침을 만들면 하나의 ‘제도’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포괄임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하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선욱기자



### 청해부대원과 작별인사

청해부대 39진 ‘충무공이순신함’(DDH-II-4400t급)의 승조원들이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가족 등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승조원 등 260여 명으로 구성된 이번 39진은 아덴만 해역에서 38진 감감찬합과 임무 교대를 한 뒤 내년 6월까지 선박호송작전, 안전항해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전장연, 출근길 1호선 기습시위…40분 지연

### 1호선 시청역~용산역 구간 승하차 반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에서 용산역까지 서울시의 무정차 조치를 규탄하며 지하철 시위를 이어갔다. 이번 시위로 출근길 1호선 하행선 열차 운행이 약 40분 지연됐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경 1호선 서울시청역에서 집결해 ‘251일 차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을 열었다. 전장연은 서울역을 지나 남영역에서부터 같은 열차에서 하차와 승차를 반복하는 지연 유발 행위를 시작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장연은 각 역에서 타고 내림을 반복하다 용산역에서 하차해 시위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약 40분 지연됐다.

이번 시위 장소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무정차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7시50분께야 공지됐다. 전장연은 사전에 정확한 이동 경로도 밝히지 않았다.

전장연 측은 “지하철 선전전”은 “출근길 지하철입니다”와 다르게 5분 이내로 탑승하는 일상적인 선전전”이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시위로 상당 시간 연착된다는 허위방송을 해왔으며, 서울시는 무정차를 통해 과잉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전장연 시위로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결정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한 차례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